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직 위	선임연구위원	성 명	변화순
출장기간	당 초	2007.7.26-2007.8.3	출장지	당 초	뉴욕, 유엔본부	
	변 경			변 경		
출장목적	“제5차 및 제6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통합심의 참가					
경비부담	○ 우리원 부담(기본연구사업비, 연구관련사업비, 수탁연구사업비) ( 4,350천원 )					
	주최측 부담					
주최기관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방문기관		면담자		협의사항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위원회 심의위원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07. 8. 20.

출장복명자 : 변화순 선임연구위원

##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5차 및 6차 이행보고서  
통합심의를 위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ited Nation's CEDAW Committee on Combined 5th and 6th  
periodic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on 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화순

## 1. 회의명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5차 및 6차 이행보고서 통합심의를 위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2. 회의 배경 및 목적

우리정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차 및 제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를 위한 대표단 참가

## 3. 참가자 규모

수석대표 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 외 18명

## 4. 회의일정

가. 기간 및 장소 : 2007.7.26~2007.8.3 (8박 9일), 뉴욕 유엔 회의장(Conference 1)

나. 일정

- 7.26 (목) : 서울 출발, 뉴욕도착
- 7.27 (금) : 타국 심의 참관
- 7.28~7.29 (토-일) : 심의준비 및 대책회의
- 7.30 (월) : 위원회 전문가-NGO 대화 참관
- 7.31 (화) : 우리나라 심의
- 8.1 (수) : 심의결과에 대한 부처회의, 관계기관 방문 등
- 8.2 (목) : 출국 (8.3 도착)

## 5. 주요내용

가. 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수석대표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4차 CEDAW 보고서 심의(1998년) 이후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난 10년간 한국의 여성인권 발전상에 대해 설명하였음.

- 1) 한국정부는 1984년 CEDAW 가입이후 6차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와 3차례의 건설적 대화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여성발전을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시행한 결과, 법과 제도상의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여성인권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함.

2) 이어 제4차 보고서 제출이후 여성인권 분야에서 우리의 노력을 아래 요지로 설명함.

- 2001년 여성부의 중앙부처로의 출범 및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여성정책 추진의 전기 마련
- 호주제 폐지, 혼인적령연령의 만18세 조정,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에 의한 차별금지 규정 포함 등 남녀 차별적 법·제도 개선 노력
- 성별분리통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010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예정
- 50%이상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추천 할당제, 군가산점 폐지 및 공직분야 등의 여성임용 목표제(1996-2002) 실시를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 20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피해자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정 등을 통한 성매매 근절 노력 및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성의 진로편중성 완화 노력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를 위한 범정부적 여성고용촉진대책 수립 및 보육 서비스 확대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정책 수립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나. 모두 발언후 CEDAW 위원들(우리나라에 대한 심의담당위원은 총 11명)은 협약 조항별로 4개 부분(협약 제1조-6조, 제7조-9조, 10-14조, 15-16조)으로 구분, 질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우리 대표단의 답변이 이어짐.

### 1) 성매매 근절 노력

- o 다수 위원들은 우리 정부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력을 환영하면서,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목적, 처벌대상, 자발적 성매매 구별의 기준, 남성 성매매 및 원조교제자 처벌 현황, 성매매 피해자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에 대해 상세히 질의함.
  - 인신매매 여성과 여아의 숫자에 대한 상세 통계의 보완 필요성도 아울러 지적
- o 우리측은 성매매 관련 처벌법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가 목적이며, 성매매 기소대상의 대부분은 알선자이고, 성판매 여성이 수사과정에서 자발성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로 간주되어 처벌이 면제되고 보호조치 및 자활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아래 부언함.
  - 여성의 성매매의 주요 동기는 경제적 이유가 많으며, 남성도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고 있으나, 남성 성판매자는 사회 관습상 자발성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 차이가 있음.

## 2) 여성의 대표성 제고

- CEDAW 위원측은 국회의 여성 진출 및 고위직 여성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규모에 비추어 그 진척 속도가 느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지방의회 의원 중 여성 비율이 저조한 이유, 민간부문에서의 여성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독려 방안, 고위직 여성공무원 증대 방안(4급 이상 임용 목표율 10% 상향조정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함.
- 우리측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최초 여성총리 탄생 등 여성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치계, 공직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임을 강조함.
  - 지방의회 의원 여성수가 적은 것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여성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정치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선거법 개정 등 추진 중(선출직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1:1로 추천하는 방안 등)
  - 군가산점 제도 폐지 이후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고, 최근 여성 관리직 합격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사법: 40%, 행정:30% 외교: 67%) 향후 10년 내 고위직 여성 공무원 진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감안하여 고위직 여성 임용 목표율 상향 조정할 계획
  - 정당 경선투자의 10%를 여성의 정치교육을 위해 사용토록 할당하고, 사용내역은 공개하여 NGO 모니터링 시행

## 3) 여성 고용 불안정

- 다수 위원들은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임금 차별, 간접 차별 관행 지속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직업교육 이외에 거시적 경제 발전계획에 여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포함시킬 것을 강조함.
- 우리측은 상기 포괄적 접근 방식에 공감을 표하고, 우리정부도 발전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복지위주로 전환하고 있는 바, '비전 2030'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3개 부처가 주무부처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여성 복지가 그 주요한 영역임을 설명함.
  - 아울러 비정규직의 문제는 한국의 산업의 구조적 전환(IT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있다기보다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임을 부언
- 또한, 비정규직의 다양한 근로형태, 최근 KTX 및 이랜드 사태 처리 방향, 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 고용 관련 성별 분리 통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음.
- 우리측은 비정규직의 다양한 근로형태 및 개념, 최근 KTX와 이랜드의 비정규직 시위 사태의 원인 및 정부개입 불가피성, 최근 개정된 주요 노동 정책을 설명하고,

2006.3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목표로 한 모성보호 제도 내용을 소개함(노동부, 보건복지부).

#### 4) 국제결혼 이주 여성 문제

- o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급증하면서 인신매매 피해 및 인권침해 사례 발생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면서, 출신국 정부와의 공동 연구 조사 여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규제안, 여성들의 한국정착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 등에 대해 문의함.
- o 우리측은 공동 조사는 한 바 없으나, 출신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오고 있으며, 인신매매 성격의 중개업체 처벌 근거를 규정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설명함.
  - 가족폭력 피해자를 위해 38개의 결혼이민 여성센터를 운영중이며, 6개국어로 24시간 운영되는 1366 긴급전화 운영

#### 5) 여성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고정관념

- o 성희롱 고용주에 대한 처벌 여부,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실시 현황, 방송에서의 성별 고정역할 철폐 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성희롱 처벌 규정 신설, 성희롱예방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교육실적 보고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설명함.
  - 공영방송 이사 9명 중 2명이 여성
  - 방송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우수 방송프로그램 포상 및 NGO 모니터링 추진 등

#### 6) 보건의료 분야

- o 그동안 낙태 감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이 낙태율이 높은 이유 및 태아성감별 여부와의 연관성, 낙태 여성 처벌 여부, 생명공학 발전과 더불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등에 대해 문의함.
- o 우리측은 낙태문제는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태아 차별 문제라기보다는 미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형법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성교육 및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등 낙태 예방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함.
  - 아울러 현재 난자채취, 배아 생성 등과 관련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여성 건강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임을 부언(보건복지부)

#### 7) CEDAW 유보조항 철회 문제

- o CEDAW 위원측은 그간 우리정부가 빠른 시일 내 유보조항을 철회하고, 선택의 정서를 비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유일한 유보조항인 CEDAW 16조g항(가족 성 선택)유보 철회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문의함.

- 우리측은 개정 민법이 2008.1월 예정대로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동 유보 철회 가능성이 열렸다고 강조하고, 현재 이에 대한 검토가 관계 부처에서 진행 중임을 설명함.
- 다만, 한국에서의 가족성의 개념은 결혼 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를지 여부가 초점이 되는 영미권(가족이 모두 같은 성을 쓰는 상황 전제)과는 달리 자녀가 부모 중 누구의 성을 계승하는지가 문제라는 점을 설명

## 8) 기 타

- CEDAW 선택의정서 관련 여성차별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국내 구제 절차(인권위 결정의 구속력 및 진정 사례 현황 등),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성폭력 기소율이 낮은 이유, 이공계 여성의 낮은 취업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 바,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함(법무부, 여성정책연구원).

## 6. 참가자 역할

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참석(타국심의참관, NGO 관련회의 참관)

나. 일일 회의 스케줄 점검 회의 참여

다. 위원회와의 대화 시 제5차 및 제6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전반적 자문

라. 교육 및 농어업 부문 질의에 대한 예상답변서 작성 및 답변 (아래자료참조)

### 1) 제 10조 교육 관련 질의

질문의 요지: 한국정부의 여성교육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조치를 취함. 그러나 여성의 과학기술관련해서는 여성의 진학률도 낮지만, 취업률 역시 낮음.

- Q. 1. 이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여학생에 대한 교육은?
- Q. 2. 보고서 안에 초/중등교사의 남녀별 통계를 자세히 적어주기 바람. 초중등 학교에서 여성교장/교감의 수를 증가키기 위한 계획은?
- Q. 3. 정부가 여학생을 위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특히 여학생을 위한 장학재단은?

장관님의 답변 :

- 1. 이공계 여성의 석박사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임. 정부는 WISE 프로그램(과기부 운영사업)을 운영 중, 멘토를 두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초중등학교와 연계하고, 과학캠프를 운영, 과기원에 연구원이 현재 21.4%에서 30%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 중

2. 초등학교에 여교사의 비율이 높으나 교장은 낮음. 2010년까지 20%로 증가시킬 목표를 둠.
3. 학교 성적에 있어서 여학생들의 학점이 남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여학생을 위한 별도의 장학 제도는 없음.

위원의 권고사항:

교직 여성의 정책결정자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을 권고함.

## 2) 제 14조 농촌여성 관련 질의

질문의 요지 : 정부는 여성농업인정책을 1차에 이어 2차 계획을 수립함.

- Q. 1. 1차계획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이 계획에 의해 혜택받은 여성은 있는지? 2차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이에 대한 피드백은 어떠한지? 1차계획과의 차별성은?
- Q. 2. 여성농업이 가족소유가 일반적이라,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주로 남성에게 돌아감.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성이 농업관련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여성농업인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 Q. 3. 농촌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피해 실태는 어떠한지? 구체적 수치가 있으면 제시하기 바람. 보호명령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장관님의 답변:

1. 농림부에 여성담당관이 있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활발히 입안됨. 현실적으로 한국의 여성농업인구는 감소 중. 농업인 전체가 7.3%임. 그 중에서 53%가 여성농업임. 1차 기본계획에서는 농업, 농업기술, 농업창업에 중점을 두었음. 2차 계획에서는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농업정책에 중점을 둬. 보육/출산 도우미: 출산의 80%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보육료의 50%를 지원함. 영농기술 집중 교육. 여성농업센터에서 가족내 일어나는 문제도 도움주고 있음. 농촌여성의 후계농업인 수: 교육인원 4,000명, 비용은 2006년의 2억2천만원 지원

변화순 추가답변:

1. 정부의 정책이행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1차농업인기본계획에 대한 점검에서 지적된 점은 농업여성인의 사회활동 및 지위는 여전히 낮고, 여성농업인에 혜택도 낮으며, 의사결정자로서의 비율이 낮음. 여성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율이 낮고 무보수 가족 종사자로서 간주되어 낮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 경영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함. '농가경영협약' 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2. 여성농업인에 대한 통계자료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의해 여성농업인 관련 통계 자료를 생산함.
3. 여성농업인의 가정폭력 피해율이 도시보다는 다소 높은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부의 1366 위기센터 지원 및 쉼터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동일하게 수혜를 받음.

## 7. 평가 및 제언

- 가. 전반적으로 심의위원들의 평가는 한국은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유보 조항을 빠른 시기에 철폐한 가장 최고의 모범국가 사례로서 뽑힐 수 있다고 평하고 있음.
- 나. 전반적으로 각 조항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질문사항들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질문들을 하였음. 이는 한국의 NGO들의 적극적이고 시의성 깊은 질문을 사전에 로비한 결과로 사료됨. 수준높은 질문에 대해 충실하게 준비한 정부측 대표단의 답변은 매우 성실하였고 유연하게 답변을 하여, 심의 후 의원들의 총평은 제5차, 6차 보고서의 내용도 충실하였으며, 질문과 답변을 매우 잘한 가장 좋은 모델케이스라는 평을 하였음.
- 다. 전반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한국여성의 지위는 현격하게 향상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다만 향후 한국 여성의 지위향상이 타국에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고위직, 정치 분야에서 여성비율을 확대해야하는 것, 여성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 내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8. 수집자료 목록, 본인 발표자료

없음.

## 9. 참가자 리스트, 관련기관 및 인사 리스트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여성가족부	장관(수석대표)	장하진	
	권익증진국장	권용현	
	국제협력팀장	강선헌	
	가족지원팀장	조민경	
	국제협력팀 사무관	고한숙	
	장관 수행비서	원소윤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장	김혜선	
법무부	인권사회과 서기관	홍관표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관	이기흠	
외교통상부	주유엔한국대표부 참사관	박은하	현지합류
	주유엔한국대표부 일등서기관	강병조	현지합류
	인권사회과 외무관	조형화	
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 사무관	김영미	
	여성고용팀 사무관	박 영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사무관	신수영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성보호팀 주무관	권 현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화순	
여성가족부	인턴	고유은	
	인턴	양정숙	